

# 매일경제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 지방소비세 도입해 불균형 막아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나눠먹기식 균형이 아니라 성장과 균형이 함께 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상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69)은 지방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예산을 골고루 나누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16개 시도를 ‘5+2’로 묶는 광역경제권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골자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최상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 발전 계획을 짜는 마스터 플래너다. 최 위원장은 경북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방분권 시대에는 적합한 명칭이 아닙니다. 대신 발전을 넣었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균형도 가능하고, 나누는 몫도 커집니다. 따라서 발전이라는 뜻에는 성장과 균형의 공존이 있어요. 자칫 균형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발전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 정부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집니다. 첫째가 광역경제권입니다. 인구 500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으로 나누고 다시 제주도와 강원도를 더해 5+2 방식으로 광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기초생활권 정책입니다. 163개 시군 단위로 일일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목적의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뭉치돈을 쥐 지역에서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일종의 포괄보조금 개념임

니다. 세 번째가 초광역개발권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해안 개발 사업을 하려면 광역경제권 중 호남권과 동남권이 다 포함됩니다. 호남고속철, 동서고속철 같은 국가 프로젝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조율하고 지원하자는 취지가 초광역개발권 개념입니다.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곧 내놓을 겁니다.

**예전 방식이 골고루 나누는 것이라면, 이제는 예산을 지역 스스로 알아서 쓰게 하거나 광역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광역 개발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16개 시도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정책으로는 특성화가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이 IT나 BT를 한다고 나서거나, 투자가 분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광역 개발은 16개 시도를 7개 권역으로 묶어, 광역경제권별로 지원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권별로 선도사업을 특화시켜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광(光)산업, 동남권에는 수송용 기계와 부품 사업 등이죠. 지식경제부가 주도해 권역별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해만 2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선도산업과 연계해 지역 선도대학도 지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12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 20곳 정도를 지정해 대학별로 매년 5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들 대학들이 지역 거점대학으로 자리 잡고, 선도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 발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한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하군요.**

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죠. 실제 예산집행은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같은 정부부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부처별 이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로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는 다르게 자체 예산(8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광역특별회계’인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소위 교부금과는 별개로 집행됩니다.

**4대강 살리기 계획이 얼마 전 나왔습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살리기 자체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연계된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지원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약 90개 시군이 4대강과 연계돼 있는데 하천 중심 초광역 사업이나 산업기능 조정 등을 해나가야죠. 이와는 별도로 내륙 산업 벨트 사업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충주-청주-행복도시-전주 등은 하나의 내륙 벨트로 연계된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앞서 초광역 개발 사업의 일환인 셈이죠.

**지역발전을 위해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역을 이끄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할 것들은 과감하게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산하에 각종 기관들이 지방청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에 넘겨주는 게 맞다고 봐요. 또 우리 세금구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입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검토할 때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의 10% 정도를 지방에 넘겨,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줘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협의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지자체들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발전 의지가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10곳입니다. 면적만 5950만㎡(약 1800만평)예요. 157개 공공기관을 15곳 정도로 나눠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곳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현재 계획 중인 혁신도시의 10% 정도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문제도 이슈입니다.

현재 주택공사는 진주 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주 지역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통합된 후 어디로 가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 입장은 해당 지자체들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자는 쪽입니다. 해당 시도 간에 다른 기관을 교환하거나, 본사·지사를 나누자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 발전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가진 쪽도 있는데요.**

수도권 규제 완화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합리하고 상충되는 규제들을 조절한 수준입니다. 규제완화보다는 합리화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공장은 수도권에 세울 수 없는데, 기존 공장이 성장한 경우는 어떡합니까. 수도권 공장 총량제한 해도 총량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산업단지가 없어서인데, 공장들이 수도권 구석구석에 위치하면서 오히려 난개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금과 고용 보조금, 세제감면 등 혜택도 늘리고 있습니다.

**광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7월 8~9일 양일간 광역발전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엽니다. 광역권 혹은 초광역 개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국토를 8개 광역지방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도 96개 지역을 22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험과 문제점, 계획 등을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겁니다.

▶ He is...

40년생/ 경북사대부고/ 경북대/ 미국 피츠버그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8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91년 서울시정개발원장/ 99년 미국 워싱턴대 초빙교수/ 2007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현)/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현)

잠깐용어

지방소비세 : 현재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활용하자는 것.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대담 = 이제경 부장 / 정리 =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12호(09.07.01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7.01 04:00:08 입력

 확대  축소  프린트  닫기

Copyright © 2007 매경닷컴(주) All Rights Reserved.